

노동정책연구
2015. 제15권 제4호 pp.61~81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이병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글은 사회보험이 경험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에 주목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잠재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수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식별하여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집단과 가입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일정 기간 이후에 사회보험 가입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고용보험 가입 경험, 특히 신규 가입 경험은 고용보험 재가입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신규 가입률을 높일수록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핵심용어 : 사회보험 사각지대, 사회보험료 지원, 경험제

I. 머리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사회보험이다.1)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논문접수일: 2015년 9월 14일, 심사의뢰일: 2015년 10월 8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10일

* 이 글은 2014년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사업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분석 및 중장기 사업 개편방안』의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lbh@kli.re.kr)

가 일자리와 연계된 사회보험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사회보험을 통한 보호는 조세 기반의 보편적인 복지제도에 못지않은 포괄성과 보장 수준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 시장은 주변 노동시장이 매우 비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가 절실한 계층일수록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논자들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확산되어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사회보험의 보편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입자 간 또는 생애 전체에 걸쳐 위험을 분산하도록 설계되는 사회보험에서 저임금과 비정규 합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자를 포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통합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보험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는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에 비추어 조세 기반의 사회보장제도는 낮은 보장 수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은 꾸준히 법적인 적용제외 요건을 완화하여 주변적 노동력을 단일한 보험체계로 포괄하여 온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이병희, 2015).

물론 주변 노동시장이 비대한 우리 노동시장 구조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정책이 사각지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법적으로는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미가입인 사각지대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실상 최초의 정책에 대해, 한편에서는 보험료를 안 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을 사각지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적이며(임병인, 2013), 다른 한편에서는 낮은 지원율과 지원 내용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의 유인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병희, 2011b).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낮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조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공공서비스, 법정 기업복지로 나누어 보면, 사회보험 지출은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절반에 이르며, 법정 기업복지 지출이 1/4에 달한다. 반면 조세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와 공공서비스 지출은 전체의 1/4 수준에 불과하다(장지연, 2009).

을 근로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김재진·이혜원, 2012).

이러한 논란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어느 정도나일 것이다. 그러나 수혜자와 미수혜자(미가입자)를 비교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다.²⁾ 더구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워낙 넓고, 수혜자들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더라도 직장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은 사회보험이 수혜를 통해 그 이익을 알 수 있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³⁾.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근로자가 이후 일자리에 사회보험에 재가입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면, 신규 가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만약 신규 가입 근로자의 재가입 확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는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잠재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개인별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수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식별하고, 이 대상자들 가운데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일정 기간 이후에 사회보험 가입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할 것이다. 한편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대부분은 사회보험을 모두 가입하지 않는다. 어느 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전산화된 행정 정보의 공유를 통해 징수 당국이 다른 사회보험 가입 조치를 비교적 신속하게 취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엔 모든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향이 있기

2) 고용보험 DB 등의 행정 자료에는 미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원천적으로 없다. 또한 수혜자가 일정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재취업 정보가 없다면, 그가 미취업 상태인지, 사회보험 미가입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3) Nelson(1970)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가지는 정보의 양이나 질을 기준으로 탐색재(search goods)와 경험재로 나누었다.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특성을 알 수 있는 탐색재와 달리 경험재는 소비자가 구입을 하고 나서야 그 특성을 알 수 있는 재화·서비스를 말한다. 사적 재화에 대한 논의를 사회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본 연구는 실증할 것이다.

때문이다(이병희, 2011a). 이 글은 고용보험에 한정하여 분석하지만, 분석 결과는 사회보험 전체(직장가입)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II.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개관

1.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표 1>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4년 8월 현재 근로자의 63.8%에 그친다⁴⁾.

사각지대는 법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질적 사각지대로 나눌 수 있다. 법

<표 1> 고용보험 적용과 가입 사각지대 : 2014년 8월

(단위: 천 명, %)

취업자			
비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¹⁾	미가입	가입
법적 사각지대	실질적 사각지대		
7,108 (27.5)	2,867 (11.1) [15.3]	3,937 (15.2) [21.0]	11,972 (46.3) [63.8]

주: 1) 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5인 미만 농업·어업, 기사서비스업, 65세 이상, 주당 평소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 근속한 일용근로자는 제외),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은 취업자 내 비중, []은 임금근로자 내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4)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가 2012년 7월부터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원칙에 비추어 임의가입 또는 임의탈퇴를 허용하는 경우를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로 분류하였다(서정희·백승호, 2014).

적인 사각지대는 별도의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체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제외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초단시간근로자,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주요한 집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관계법에서 적용이 제외되어 온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여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의 주된 유형은 실질적인 사각지대로서, 2014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21.0%에 이르며, 4백만 명에 가까운 규모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은 보험료 부담 이외에 소득원이 노출되는 사업주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을 유발한다. 탈세 유인이 강력할수록 사업주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불이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의무 불이행이 적발될 가능성이 낮거나, 적발되었을 때 받는 벌칙이 의무를 이행했을 때 소용되는 비용보다 작다면, 의무 불이행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이병희, 2013). 기여 기피(contribution evasion)를 줄이는 전통적인 정책은 사회보험 징수 당국의 적발과 제재라는 행정적인 수단이다. 예를 들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를 적발하여 인정성립조치를 실시하며, 체납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및 사회보험공단 간 고용·소득·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전산화된 행정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입 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각지대의 취업 및 소득 정보에 대한 공적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징수 당국의 조사인력을 대폭 늘리거나 정보 공유를 확대하더라도 가입 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발굴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이병희, 2011a).

2.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 두루누리 사업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2012년 2~6월 16개 기초자치단체 대상의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12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유형인 보험료 미납 문제에 주목하여, 가입자의 기여에만 의존하던 재정 운영 방식에서 조세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의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하는 최초의 정책이다(이병희 외, 2012).

지원대상자 요건은 사업체 규모와 월평균 보수이다. 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월평균 보수 요건은 매년 상향되고 있다. 보수의 하한액은 2013년 폐지되었으며, 근로시간 요건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는 인원은 2012년 53만 명에서 2014년 6월에 6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고용보험 기준으로 추계한 두루누리 사업의 잠재적인 지원대상은 2014년 3월 253만 명에 이르므로(이병희 외, 2014), 지원받은 인원은 잠재적인 지원대상의 24.5%에 해당한다.

두루누리 사업의 시행 1년 시점에서 유경준 외(2013)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사회보험 가입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방대한 사각지대 규모에 비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사회보험 가입 유인을 제고하기에는 지원 내용(건강보험료 등 제외)과 지원율(50%)이 낮은 탓도 있다. 신규 가입할 경우, 지원금액에 비해 추가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한다.⁵⁾

〈표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변천

		2012.7~12월	2013	2014	2015
지원대상자 요건	사업체 규모	10인 미만			
	월평균 보수	3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	130만 원 미만 (4월~)	135만 원 미만	140만 원 미만
지원수준		1/3~1/2	1/2(4월~)	1/2	1/2
예산(백만 원)			538,438	555,155	579,265
지원 인원 (만 명)	고용보험	53	61	62	
	국민연금	67	79	83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Ⅳ: 환경노동위원회」, pp.210~211.

5) 노사가 부담하는 전체 사회보험료율(건강보험과 산재보험 포함)은 월평균 보수의 18.8%다. 보험료 가운데 5.275%를 지원받는 데 비해 13.525%는 노사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표 3〉 두루누리 사업 수혜자의 구성

(단위: 천 명, %)

		규모 (비 중)
신규	3년 내 최초 가입	290 (18.3)
	기타	488 (30.8)
기존		804 (50.8)
전 체		1,582 (100.0)

자료: 두루누리 DB-고용보험 DB 결합자료(이병희 외, 2014에서 인용).

<표 3>은 2014년 6월까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수혜자(연인원)를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로 나누고, 신규 가입자를 다시 최근 3년 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지원한 비율은 전체 수혜자의 50.8%이며, 지원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49.2%다. 후자에는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미가입 상태의 재직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다. 미가입 상태의 재직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아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사각지대 해소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 반면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엔 지원 때문에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신규 채용자 가운데는 지원이 없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규모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3년 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규모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최초 진입자나 고용보험 미가입 일자리를 전전하던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3년 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는 전체 수혜자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Ⅲ.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잠재적 효과

1. 분석 자료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 이후

일자리의 사회보험 가입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이후 사회보험 가입 여부, 재취업 일자리 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별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통계청의 사용 승인을 얻어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Microdata system)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포함)」 자료에서 개인별 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⁶⁾ 이 조사는 두루누리 사업의 실제 수혜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두루누리 사업의 수혜 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적인 대상자를 식별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또한, 이 조사는 횡단면 조사를 목적으로 설계된 조사이기 때문에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⁷⁾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관한 시의성 있는 패널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임을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글은 두루누리 사업의 수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 경험의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잠재적인 효과를 추론하고자 한다.

주요 변수와 분석 자료의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은 사업체 규모와 월평균 임금⁸⁾ 정보를 이용하여 식별하였다. 이때 고용보험의 법적인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제외하였다.

둘째, 고용보험의 신규 가입 경험이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의 관심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경험에 대한 변수를 조작적

6) 가구 번호와 성,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식별번호를 작성하고, 동일한 식별번호가 있는 개인들은 제거하였다.

7) 1년 경과 시 표본 수가 50% 탈락하고, 패널화된 자료에 대한 가중치가 없어서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될 수 있다. 표본 탈락이 무작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응답을 계속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 분석은 통계적인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유경준(2008)은 패널 구성 과정에서의 표본 탈락이 통계 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비임의적(non-random)이지는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8)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인 ‘월평균 임금’과 과세의 기준인 ‘월평균 보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많은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학비 지원금은 보수에 포함되는 반면 임금에서는 제외된다. 일정한 한도의 식대, 교통비, 연장근로수당 등은 보수에 제외되지만 임금에는 포함된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서는 둘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으로 정의하였다. 부가조사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있는데, 연이은 두 시기의 부가조사를 패널화해서(‘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자료’) 두 시기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정보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경험을 분류할 수 있다. 뒷 시기를 기준으로 ‘가입’과 ‘미가입’을 나누고, ‘가입’을 다시 두 시기에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계속 가입’, 미가입·적용제외·비임금 근로·비취업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신규 가입’으로 다시 나누었다.

<표 4>에는 각년 3월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경험별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2011. 8.~2012. 3. 기간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실시되기 이전 시기이며, 2012. 8.~2013. 3. 기간과 2013. 8.~2014. 3. 기간은 실시된 이후의 시기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실시된 이후에 계속 가입률과 신규 가입률은 소폭 증가하였다. 계속 가입률은 2012년 3월 20.0%에서 2014년 3월 23.3%로 증가하였으며, 신규 가입률도 2012년 3월 8.9%에서 2014년 3월 9.3%로 증가하였다.

셋째,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이후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의 1년 후의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결합하였다. 앞서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자료’에 1년 후의 부가조사를 결합하여, 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이므로 노동이동을 빈번하게 경험한다. 1년간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개인별로 결합한 패널자료를 구성하면 노동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웃하는 월별로 모두 임금근로를 하면서 직장 시작 시기가 동일하면 ‘직장 유지’, 그렇지 않으면 이직으로 구분한다.

<표 4> 두루누리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경험별 추이

(단위 : %)

	2011.8.~2012.3.	2012.8.~2013.3.	2013.8.~2014.3.
계속 가입	20.0	22.1	23.3
신규 가입	8.9	9.2	9.3
미가입	71.1	68.7	67.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자료」.

〈표 5〉 두루누리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경험별 표본 특성

	계속 가입		신규 가입		미가입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남성	0.175	(0.381)	0.793	(0.407)	0.141	(0.348)
15~29세	0.151	(0.358)	0.236	(0.426)	0.178	(0.383)
40~49세	0.245	(0.431)	0.229	(0.421)	0.306	(0.461)
50~59세	0.267	(0.443)	0.229	(0.421)	0.283	(0.451)
60세 이상	0.132	(0.339)	0.143	(0.351)	0.096	(0.294)
중졸 이하	0.296	(0.457)	0.164	(0.372)	0.298	(0.457)
초대졸	0.164	(0.371)	0.179	(0.384)	0.090	(0.286)
대졸 이상	0.113	(0.317)	0.129	(0.336)	0.107	(0.309)
농림어업업	0.000	(0.000)	0.000	(0.000)	0.012	(0.111)
건설업	0.038	(0.191)	0.029	(0.167)	0.095	(0.293)
도소매음식숙박업	0.191	(0.394)	0.250	(0.435)	0.474	(0.50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032	(0.177)	0.057	(0.233)	0.016	(0.12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647	(0.479)	0.557	(0.499)	0.286	(0.452)
관리전문사무직	0.399	(0.490)	0.364	(0.483)	0.176	(0.381)
서비스판매직	0.202	(0.402)	0.286	(0.453)	0.380	(0.486)
단순노무직	0.321	(0.467)	0.271	(0.446)	0.326	(0.469)
비정규직	0.507	(0.501)	0.493	(0.502)	0.606	(0.489)
직장 유지	0.827	(0.378)	0.707	(0.457)	0.530	(0.499)
계속 가입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신규 가입	0.000	(0.000)	1.000	(0.000)	0.000	(0.000)
비자발적 실직	0.040	(0.197)	0.121	(0.328)	0.117	(0.322)
직장간 이동	0.100	(0.300)	0.107	(0.310)	0.324	(0.468)
표본 수	371		140		971	

자료: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자료.

최종적으로 구성한 자료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자료’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과 2012년 8월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개인별로 결합하여 고용보험 가입 경험을 파악하고, 여기에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결합하여 1년간의 노동이동 여부를 식별하고, 마지막으로 2013년 8월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결합하여 1년 후의 일자리 및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획득하였다(2012. 3. - 2012. 8. ~ 2013. 8. 자료). 사회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2012. 8. - 2013. 3. ~ 2014. 3. 자료를 추가로 구성하여, 두 자료를 합쳐서(pooling) 분석하였다. 고용보험 가입 유형별로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빈번한 노동이동을 경험한다. 1년간의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노동이동을 살펴보았다. 우선, 직장유지와 이직을 분류하고, 이직을 실직, 직장 간 이동, 자영업 전환으로 세분하였다. ‘실직’은 취업 상태에서 다음 조사월에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정의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이직 사유에서 개인·가족 관련 이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 작업여건 불만족으로 이직했으면 ‘자발적 실직’,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정년퇴직·연로를 이유로 이직했으면 ‘비자발적 실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직장이동’은 이웃하는 월별로 취업 연월이 다르고, 취업 연월이 다음 조사월과 일치하는 경우는 실업을 경유하지 않고 다른 임금 일자리로 이동을 한 경우로 식별하였다. 또한, 이웃하는 월별로 취업 연월이 다르고, 주된 일 이외에 부업을 가지고 있다가 부업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경우도 직장을 이동한 경우로 간주하였다. ‘자영업 전환’은 임금근로자가 바로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직을 경유하여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표 6>에는 두루누리 지원대상자의 1년간 노동이동 경험률이 제시되어 있다. 대상자의 1년간 직장유지율은 44.5%에 그쳐, 절반 이상이 다양한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보험 가입 경험별로 보면, 고용보험 계속 가입 경험자의 이후 1년간 직장유지율은 71.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신규 가입 경험자의 1년간 직장유지율은 55.6%에 그친다. 한편, 지원대상자의 41.1%가 1년 동안 실직을 경험하는데, 신규 가입 경험자의 경우에도 38.2%에 이르며, 미가입자도 43.7%로 높다.

경험재로서의 사회보험은 그 혜택을 받았을 때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의 대표적인 혜택은 실업급여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조사하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는 조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미취득 사유를 다음

〈표 6〉 두루누리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경험별 1년간 노동이동 경험률

(단위 : %)

고용보험 가입 경험 노동이동 유형	계속 가입 경험	신규 가입 경험	미가입	전체	
직장 유지	71.4	55.6	38.9	44.5	
실직 ¹⁾	20.9	38.2	43.7	41.1	
	자발적	13.0	19.7	30.4	25.0
	비자발적	7.4	18.0	17.1	19.1
직장 간 이동	9.5	13.5	32.1	26.2	
자영 전환	2.3	3.4	8.2	7.9	

주: 1) 복수의 실직을 경험하고 이직 사유가 각기 다르면, 자발적 실직 비율과 비자발적 실직 비율의 합이 실직 비율을 상회하게 됨.

2) 실직, 직장 이동, 자영 전환은 배타적인 분류가 아님. 따라서 직장 유지를 포함하여 각 사건을 경험할 확률을 합하면, 100%를 넘을 수 있음.

자료: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자료

과 같이 순차적으로 정의하였다(이병희, 2009).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둘째,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⁹⁾ 셋째, 이직사유가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정년퇴직·연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직인 경우, 넷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표 7>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경험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여준다. 지원대상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비율은 5.7%에 그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에 종사하다가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무려 77.7%에 이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 경험별로 보면, 신규 가입 경험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비율은 23.3%에 이른다. 계속 가입 경험자의 27.3%에 근접한 수준이다.

9) 누적적인 근로경력 또는 고용보험 가입경력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직 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피보험기간 미충족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7〉 두루누리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경험별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 비율

(단위: %)

고용보험 가입 경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계속 가입 경험	신규 가입 경험	미가입	전체
미가입	0.0	0.0	100.0	77.7
피보험기간 미충족	13.6	38.4	0.0	5.2
이직사유 미충족	59.1	38.4	0.0	11.3
수급자격	27.3	23.3	0.0	5.7

자료: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자료.

2.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 가운데 1년 내에 이직하여 재취업한 자료 한정하면,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1년 후의 재취업 일자리에 고용보험 가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다. <표 8>은 고용보험 가입 경험별로 1년 후 고용보험 가입률이 제시되어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의 1년 후 재취업 일자리에 고용보험 가입률은 16.9%에 그친다. 그러나 신규 가입을 경험한 근로자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가입률은 무려 70.7%에 이른다. 신규 가입 경험자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가입률은 계속 가입 경험자의 76.6%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으면, 이직하더라도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두루누리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경험별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률(이직 경험자)

	평균값 (표준편차)
계속 가입 경험	0.766 (0.427)
신규 가입 경험	0.707 (0.461)
미가입	0.169 (0.375)

자료: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자료.

다른 특성들을 통제하고서도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이후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1년 후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성, 연령, 학력 등의 인적 특성과 산업·직업·고용형태 등의 재취업한 일자리 특성을 사용하였다. 고용보험 가입 경험 변수로는 미가입 경험을 기준 더미로 하여, 계속 가입 경험 더미와 신규 가입 경험 더미를 사용하였다.

〈표 9〉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로짓 추정, 이직경험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한계효과
상수항	-1.171	(0.549)**	
남성	0.141	(0.296)	0.020
15~29세	0.685	(0.438)	0.096
40~49세	0.486	(0.414)	0.068
50~59세	0.171	(0.464)	0.024
60세 이상	-0.828	(0.606)	-0.116
중졸 이하	-0.546	(0.320)*	-0.077
초대졸	0.441	(0.421)	0.062
대졸 이상	0.453	(0.485)	0.064
농림어업업	0.163	(1.173)	0.023
건설업	-0.777	(0.576)	-0.109
도소매음식숙박업	0.266	(0.484)	0.037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032	(0.921)	-0.0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728	(0.502)	0.102
관리전문사무직	-1.135	(0.608)*	-0.159
서비스판매직	-0.954	(0.528)*	-0.134
단순노무직	-0.579	(0.446)	-0.081
비정규직	-0.219	(0.267)	-0.031
계속 가입 경험	2.894	(0.377)***	0.406
신규 가입 경험	2.429	(0.415)***	0.341
-2 Log L		499.645 ***	
N		561	

주: 1) 기준 집단은 여성, 30대, 고졸, 제조업, 생산직,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임.

2)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3) 한계효과는 모든 변수의 평균값 수준에서 연속 변수의 경우 $dF(x)/dx$, 더미 변수의 경우 0에서 1로 변할 때의 확률 변화분을 의미함.

자료: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자료.

<표 9>의 추정 결과를 보면, 인적 특성과 재취업한 일자리 특성을 통제하고서도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은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 확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모든 설명 변수의 평균값 수준에서의 한계효과를 보면, 신규 가입 경험은 미가입 경험에 비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34.1%포인트 높게 나타난다.¹⁰⁾

앞서의 추정결과는 고용보험 가입 경험의 평균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이직을 경험하더라도 단순히 직장을 이동한 경우와 실업을 경험한 경우는 위험도가 다를 것이다. 또한, 실업을 경험하더라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 위험도가 더 높을 것이다. 노동시장 위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경험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추정 모형에 노동이동 유형 변수들과, 노동시장 이동 유형 × 고용보험 가입 경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효과를 포함하였다.

<표 10>의 추정결과를 보면, 직장 간 이동 경험은 자발적인 실직 경험에 비해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 결정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실직을 경험했을 때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은 재취업 시 고용보험 가입 확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즉, 비자발적인 실직을 경험했을 때 자발적인 실직 경험에 비해 고용보험 가입률이 10.2%포인트 하락하지만,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험이 있는 비자발적인 실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19.3%포인트(=10.2%p+29.5%p) 높게 나타난다. 즉, 노동시장 위험이 높은 상황에 직면할수록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험은 고용보험 재가입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¹¹⁾

10)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의 재가입률이 높은 것은 개인적인 이질성(individual heterogeneity) 때문일 수 있다. 관측하지 못한 특성 때문에 허위의 상관관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적인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긴 패널자료가 필요하지만, 이 글이 사용한 패널자료는 관찰기간이 18~20개월에 그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경험 이전의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다.

11) 고용보험의 대표적인 혜택인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만 이직하는 경우에만 수혜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 재가입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추정결과는 고용보험의 경험재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다른 사회보험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남아 있는 연구과제다.

〈표 10〉 노동이동 유형별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로짓 추정, 이직 경험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한계효과
상수항	-0.979	(0.594)*	
남성	0.127	(0.307)	0.018
15~29세	0.721	(0.445)	0.100
40~49세	0.584	(0.423)	0.081
50~59세	0.254	(0.475)	0.035
60세 이상	-0.803	(0.634)	-0.111
중졸 이하	-0.539	(0.327)*	-0.075
초대졸	0.540	(0.425)	0.075
대졸 이상	0.463	(0.489)	0.064
농림어광업	0.595	(1.198)	0.082
건설업	-0.694	(0.598)	-0.096
도소매음식숙박업	0.175	(0.498)	0.02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008	(0.950)	0.00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0.640	(0.521)	0.088
관리전문사무직	-1.113	(0.629)*	-0.154
서비스판매직	-0.936	(0.539)*	-0.129
단순노무직	-0.521	(0.457)	-0.072
비정규직	-0.246	(0.272)	-0.034
계속 가입 경험	3.065	(0.740)***	0.423
신규 가입 경험	1.855	(0.629)***	0.256
비자발적 실직	-0.740	(0.390)*	-0.102
직장 간 이동	-0.131	(0.290)	-0.018
비자발적 실직 * 계속 가입	0.492	(0.897)	0.068
직장 간 이동 * 계속 가입	-0.368	(0.787)	-0.051
비자발적 실직 * 신규 가입	2.137	(0.899)**	0.295
직장 간 이동 * 신규 가입	-0.324	(0.828)	-0.045
-2 Log L	491.153***		
N	561		

주: 1) 기준 집단은 여성, 30대, 고졸, 제조업, 생산직, 고용보험 미가입, 자발적 실직을 경험하는 근로자임.

2)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자료.

IV.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이 글은 사회보험이 경험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잠재적 효과를 추론하였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수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식별하여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집단과 가입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일정 기간 이후에 사회보험 가입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하는 분석을 하였다.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를 개인별로 결합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동태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고용보험 신규 가입률이 소폭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용보험 신규 가입 경험은 재취업 일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자발적인 실적이 발생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경험은 재취업 일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인다. 노동시장 위험이 높은 상황에 직면할수록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험이 고용보험 재가입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이 신규 가입률을 높일수록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두루누리 사업은 기존 가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신규 가입자와 동일한 지원율을 적용하고 있다. 도입 당시, 신규 가입자만을 지원할 경우 기존 가입자를 해고하거나 신규 가입자로 허위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지원율은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이 경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율이 낮아져도 기존 가입자들이 사회보험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이후의 재가입 선택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발견되므로, 신규 가입을 우대하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높일 것이다. 특히 사회보험의 이득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예를 들어 3년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를 더욱 우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원 내용(건강보험료 등 제외)과 지원 수준(50%) 면에서 사각지대 가입을 촉진하는 ‘마중물’로서 금전적인 유인은 낮다. 그러나 지원 내용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더라도 세원 노출을 꺼리는 사업주가 활발하게 지원을 신청할 것이라 기대는 무리일 수 있다. 사회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권리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보험 가입 의무를 기피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의무 이행 촉구를 위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운 것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사회보험 징수 당국이 파악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이외에 적용·징수 업무를 비롯한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이유다.¹²⁾

이 글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수혜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글은 수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식별하여 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등에서 사회보험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두루누리 사업 수혜 여부를 추가로 설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근로자의 보험 가입 요구를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이직을 선택하는 방법 이외에는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직 근로자가 사회보험

12)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자료와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 내역 확인신고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의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30.1%에 불과하다. 비용 지출에 대한 손비 인정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신고하지만 사회보험 신고는 누락하는 사업주가 많기 때문이다. 조세 행정 자료와 사회보험 피보험자 정보를 연계하거나, 나아가 소득세와 사회보험 신고를 일원화하면, 누락 사업장과 근로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병희 외(2014) 참조.

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선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이직 경험자에 한정하여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가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보험 의무 이행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 국회 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Ⅳ: 환경노동위원회」.
- 김재진·이혜원(2012). 『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연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서정희·백승호(2014).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임금근로자 적용제의 규정과 규모의 변화」. 『노동정책연구』 14(3): 37~78.
- 유경준(2008).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분석 - 최근 고용부진과 관련하여」. 한국 노사관계학회, 비정규직법 시행 1주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토론회 발표문, 2008.10.24.
- 유경준·최바울·김혜원·권현지·유한욱·강창희 외(201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고용노동부·한국개발연구원.
- 이병희(2009).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전망 역할 평가」. 『경제발전연구』 15(1): 69~93.
- _____(2011a).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동향과 전망』 통권 82호, pp.185~211.
- _____(2011b).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공식고용 촉진 방안」. 『노동리뷰』 통권 제80호, pp.5~28.
- _____(2013). 「비공식 노동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경제발전연구』 19(2): 81~109.
- _____(2015). 「고용보험 20년의 평가와 과제: 사각지대와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발표문, 2015.6.29.
- 이병희·강성태·은수미·장지연·도재형·박귀천·박제성(201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 장지연 · 김혜원 · 이시균 · 심규범 · 강병구(2014).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분석 및 중장기 사업 개편방안』.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임병인(2013).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과제」.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 발표문. 한국재정학회 · 한국조세연구원.

장지연(2009). 「한국 사회 젠더레짐과 복지국가의 성격」. 정무권 편,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II)』. 인간과복지.

Nelson, P.(1970). "Information and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8 (2) : 311~329.

abstract

Evaluation on the Effect of Social Insurance Premium Subsidy Program the for Low-wage Workers

Lee Byung-hee

Although social insurance has been extended to all workplaces, non-compliances are still widespread. To promote registration for social insurance, Korea introduced a program to subsidize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for low-wage workers in 2012. This paper evaluates the potential impact of the new subsidy program. Because the relevant data on both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is lack, I construct panel data of the eligible workers for the subsidy. Dividing the registered and the non-registered among the eligible workers, I investigate which the experience of registering the social insurance scheme increases the likelihood of re-registering at the new job or no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new subscription has the positive effect on re-registering of social insurance scheme. They implies that the subsidy policy can contribute to reducing informal work.

Keywords : non-registration of social insurance, social insurance premium
subsidy program, experience goods